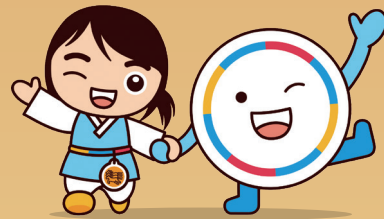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
부패·공익침해신고 상담 1398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600-8172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 www.clean.go.kr



더 청렴하게
더 국민 곁으로

국민권익

국민의 권익을 높이는 ACRC

AUTUMN

2021. Vol 70

한발 먼저 국민을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과 함께합니다.

Speed Up



청백이

AUTUMN 2021 vol. 70

표지 이야기



2021 <국민권익>은 '변화의 스위치를 켜다'는 주제로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며 더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 시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발행일 2021년 10월 22일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전현희
편집인 허재우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우 30102)
전화 044-200-7081
팩스 044-200-7911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naver.com/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acrc
기획·디자인·인쇄 더에이치(주) 031-247-5141

변화를 만드는 우리



04

권익은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08

권익, 삶을 말하다

당당하고 맛있는 한 끼, 아이들을 위한 '착한음식점'

12

ACRC News

국민권익위 주요 소식

16

권익 빅데이터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20

이 달의 키워드

독감 예방접종

함께 나누는 이야기



22

세상을 읽다

현실 세계를 흔드는 초현실 세계 '메타버스'

26

권익비전

적극행정 국민신청하고
소극행정 재신고하세요!



30

권익 포커스

국민의 곁에서 언제나 ON

34

권익 바로세우기

권익이, 달라집니다!

국민권익 더하기

38

청백이와 권익이

아픈 아내 치료비에 생계비까지
막막해진 치킨집 할아버지



40

그들이 사는 세상

국민이 원하면 정책이 바뀐다!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장려 '적극행정 TF'

44

시간을 걷다

설악산, 색의 경계를 허물다 '양양 주전골 산책'

50

청렴한 수기

2020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기 부문 장려상

56

국민 생각함

국민의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

58

#권익

독자의 소리 / 권익위 열독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 공익신고 1,376만건 접수
- 금전 처분 1조 6,300억원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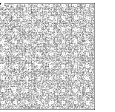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신고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공익침해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예방하고자 2011년 9월 30일에 처음 시행됐다. 이후 10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우리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대표적인 법으로 자리매김했다.

Writer. 편집실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ACT



+ 공익신고자 보호법, 10년간의 변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0년간 국민권익위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에 총 1,376만여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어 1,285만여 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된 공익신고 중 849만건(66%)에서 혐의가 적발됐고 공익신고로 인한 금전처분 부과금액은 약 1조 6,300억 원에 달했다.

또한, 신고자 등에게 총 104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보상·포상금, 구조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간 7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180개에서 471개로 확대되었고, 그리고 신고자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자 신분을 공개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위법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 신고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처분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신고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했다.

+ 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 건수 크게 증가해

이처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제도의 인지도를 높인데 힘입어 지난 10년간 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신고자 원상회복 요구,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징계요구·고발조치, 신변보호조치, 책임감면 요구 등 공익신고자를 적극 보호해왔다.

제도 초반 5년간('11~'15) 보호 인용사건이 20건에 불과했는데 이후 5년간('16~'20) 6배 증가한 123건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 결정을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 기념 홍보 슬로건 시상식

이와 함께 국고 수입 회복이나 공익증진에 기여한 공익신고자에게 10년간('11~'20) 총 104억 5천만 원의 보상·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9월 30일 브리핑을 통해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도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내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471개 법률로 확대해 왔지만 그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고, 그 밖에도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색출하도록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등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신고 이후 조직 내에서 고립되기 쉬운 신고자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는 법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이 여전히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미래를 위한 토론회도 열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한 공개토론회도 열렸다. 국민권익위와 한국법제연구원은 9월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성과 공유와 제도 재설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공익신고의 범위, 신고기관 확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일원화 문

제 등 향후 개선 및 보완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토론회 사회는 박흥식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발제는 김기선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과 김윤정 법제연 연구위원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국회, 시민단체, 언론, 학계, 신고자를 각각 대표하여 김형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장, 조창원 파이낸셜뉴스 기자, 김준성 동국대학교 행정·경찰공공학부 교수, 줄기세포 조작의혹을 제보한 류영준 강원대 의대교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지난 10년간의 성과

를 바탕으로 향후 10년의 운영방향을 설계해 나가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신고 이후 조직 내에서 고립되기 쉬운 신고자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는 법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 및 10주년 기념토론회 생방송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 기념 공개토론회



당당하고 맛있는 한끼, 아이들을 위한 ‘착한음식점’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아동급식 자발적 할인을 제공하는 착한음식점.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마련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엔 착한음식점을 방문해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Writer. 편집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아동급식 자발적
할인을 제공하는
착한음식점을
방문해 격려하고
있다

아동급식제도의 사각지대, 해결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결식 우려 아동들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보다 나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그간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아동들의 결식이 늘어나는 등 저소득 가정의 돌봄 사각지대가 심화되었고, 결식 우려 아동들이 학교 밖에서 식사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는 낮은 지급단가와 사용처 부족 등으로 급식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아동급식제도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제도상 문제로 인한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장기의 아동들이 마음 편히 다양한 곳에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가 아동급식 지원 단가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각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 기준 이상으로 아동급식 단가를 책정하도록 하고, 편의점 외 다양한 일반음식점 등에서 아동급식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확대하는 한편, 아동들이 쉽게 음식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인터넷 주요 포털(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위치기반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동이 낙인감을 느끼지 않도록 급식카드 디자인을 일반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만들고 가맹점 등록절차도 간소화하도록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가게’ 또는 민간의 ‘선한영향력가게’ 등의 사례를 참고해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홍보 등 지원방안도 마련하도록 하였다.

자발적인 사업주 참여,
우리 사회의 모범

이러한 가운데 지자체별 급식카드 가맹점 중 일부 사업주들은 지자체의 낮은 급식 지원 단가를 고려, 자발적으로 음식 가격을 할인하는 데 동참하고 있어 이목이 집

중된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음식가격을 급식지원 단가인 5,000원으로 인하여 아동급식카드 소지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점이 30여곳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는 이 음식점들을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에 ‘착한음식점’으로 게시해 홍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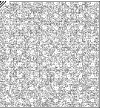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아동급식 할인 제공 음식점을 방문,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달했다.

성장기 아동들이 ‘착한음식점’을 통해 보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찾아가기 쉬운 곳에 ‘착한음식점’들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나눔과 칭찬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는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음식점’

상호	주메뉴	주소	연락처
수미家 찌개전문점	버섯불고기, 부대찌개, 쭈꾸미볶음	호려울로 51 205호	044-866-5288
엄마 씬밥집	쌈밥정식, 닭갈비정식, 우렁된장찌개, 돼지주물럭	한누리대로 194 세종의 아침 216호	044-862-7538
장군칼국수	칼국수, 떡국, 만두	장군면 장기초교길 26	044-866-9980
순남이네	된장찌개, 비지찌개	부강면 시장길 23	044-867-7738
제주소고기해장국 & 곱도리탕	해장국, 짬뽕국밥	조치원읍 충현로 185, 1층	044-865-5005
집밥연구소 찬미 찬가(도시락 전문점)	돈가스, 소불고기, 제육덮밥, 햄버거스테이크	마음안1로 167	044-866-8245

상호	주메뉴	주소	연락처
고등어밥상	고등어, 갈치, 보리굴비 등 전 메뉴	장군면 월현윗길 38-7	044-865-8592
서리서리 멸치국수 세종시청점	멸치국수, 어묵국수, 김밥 등 전 메뉴	호려울로 19 스마트허브3, 107호	044-862-2955
국수나무 세종시청점	소고기낙지덮밥, 돈가스카레덮밥, 생면국수, 우동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101호	044-866-1506
맛있는 부엌 (세종시니어클럽)	모듬찬 (반찬 전문점)	새롬로 14, 새롬 종합복지센터 1층	044-867-5039
인생짬뽕	짜장면, 짬뽕, 볶음밥	장군면 장기초교길 6	044-868-0394
세종김밥천국	돈가스, 돌솥비빔밥, 함박스테이크, 갈비탕	한누리대로 2143 1층 110호	044-866-5262
유정칼국수	칼국수, 동태찌개, 제육볶음	장군면 장척로 417-1	044-857-5999
가마솥죽발	청국장	도움8로 91, 203동	044-868-4546
가미갈비탕	갈비탕	다솜1로 113, 1층	0507-1337-0079
본도시락 세종시청점	광양식바싹불고기반상, 담양식떡갈비반상, 돈까스반상, 부추제육볶음반상	한누리대로 2135, 스타힐타워 103호	044-864-4266
본죽&비빔밥cafe 세종대평점	쫄깃감자만두, 아침엔본죽	한누리대로 2265, 세종메디컬센터 1층	044-867-5758
본죽&비빔밥cafe 세종시청점	본나물비빔밥, 야채죽	한누리대로 2144, 스마트허브 2, 105호	044-867-6277
삼성반점	짜장면	조치원읍 충현로 72, 상가동 114호	044-864-2228
우체국떡볶이	전 메뉴	조치원읍 새내12길 14	044-865-7501
정다른 김밥천국	김밥, 떡볶이, 라면	한누리대로 2265, 1층 112호	0507-1448-0422
중화반점	전 메뉴	호려울로 9, 네이버타워 201,202호	044-865-1333
퍼블릭	씨푸드토마토파스타, 까르보나라, 마르게리따 피자	노을3로 94, 1동 103, 104호	0507-1336-6045
피자와 김밥천국	전 메뉴	조치원읍 행복12길1	044-865-0446
고봉민김밥 아름답	오므라이스, 우동	보듬3로 100, 102호	044-867-4912
김가네김밥	전 메뉴	남세종로 466, 아평빌딩 106호	044-867-0873
김밥천국 종촌점	카레, 짜장덮밥	도움1로 105, 532동 지하1층 109호	044-866-8801
대교한우촌식당	백반	장군면 장척로 408	044-857-1162
바पुर리 숯불김밥	라볶이, 쫄면	보듬3로 100, 109호	044-865-9888
버무리떡볶이 세종도담점	김밥, 떡볶이 등	보듬3로 8-15, 해피리움상가5동, 104호	044-862-8711



①

적극행정 신청하고, 소극행정 신고하세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정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우수공무원 포상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란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국민이 공익 목적의 적

극행정을 요청하면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2017~2019)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정책제안은 26만여 건에 이르나 실제 정책 등으로 채택되는 비율은 4.6%(11,884건)로 미미한 수준이다.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에서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과 공익 목적의 민원 등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면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더라도 관계기관에 적절한 처리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사후관리 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행정 신고를 했는데도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신고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소극행정에도 대처해 나갈 것이다.

②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65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 중 투기 의심사례 21건에 대해 수사 등을 의뢰했으며 종결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13건의 신고사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의뢰 사건 중 모 지방의회 의장과 가족들이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 투기한 의혹이 있는 사건과 중앙부처 소속청 국장급 공무원이 연고가 없는 지역에 12억여 원 상당의 농지와 토지를 집중적으로 취득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사건 등 2건은 정부합동특

별수사본부에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17건에 대해서 수사 및 조사기관에서 수사 및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 40건, 제3자 특혜 제공의혹 6건, 농지법 위반의혹 3건, 기타 8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및 상급 감독기관 등에 철저한 수사 및 조사를 요청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i 자세히 알아보기

적극행정TF 044-200-7225

i 자세히 알아보기

심사기획과 044-200-7694 / 부패심사와 044-200-7726

③

6개 주요 공기업과 윤리준법경영 확산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윤리준법경영 확산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1일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이용 토지투기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반부패·청렴 혁신과제'의 일환인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및 인증 도입'을 위해 진행됐다.

향후 이들은 국민권익위와 협력해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윤리준법경영 문화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자세히 알아보기

민간협력담당관실 044-200-7164

④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및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지난 8월 23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후 그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조사는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동일한 인적구성의 조사단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조사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12명(13건), 열린민주당 총 1명(1건)으로 확인됐다.

자세히 알아보기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 044-200-7415

⑤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성균관대 법전원 '성심행심'팀 최종 우승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한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심행심' 팀이 최종 우승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인 법전원생들에게 대표적인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6년 첫 대회를 시작하여 올해로 여섯 번째 경연대회를 마련했다. 최우수상은 고려대 법전원 행필승소 팀이, 우수상은 부산대 법전원 소확행 팀, 고려대 법전원 신사독행 팀이 각각 수상했다.

자세히 알아보기

행정심판총괄과 044-200-7817

⑥

슈퍼주니어 규현, 국민권익위 홍보대사 겸 명예 정부합동민원센터장



슈퍼주니어 멤버인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규현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홍보대사 겸 명예 정부합동민원센터장으로 위촉됐다.

지난 9월 8일 '홍보대사 겸 명예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이 된 규현은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명예 센터장으로 업무를 소개하고 직접 민원상담도 체험했다.

위촉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에 따라 소수의 관계자만 참석하고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www.youtube.com/acrc0229)'을 통해 생중계됐다.

자세히 알아보기

홍보담당관실 044-200-7077

특별민원심사과 02-2100-5053

빅데이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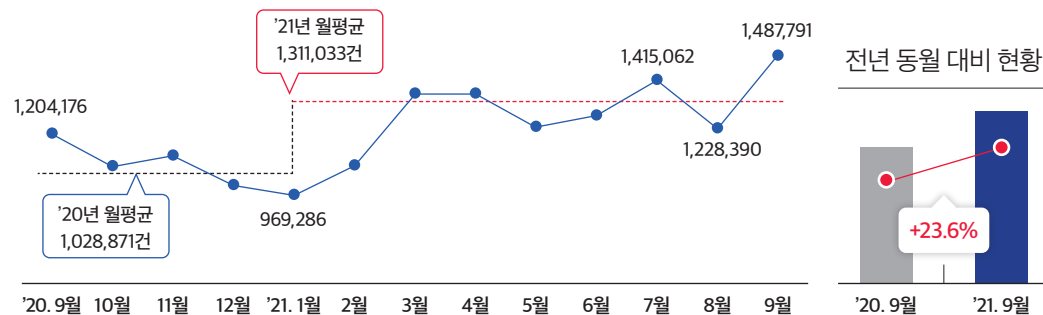
보는
국민의 소리

민원 빅데이터는 민원 현황을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각종 연구와 상품,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민원동향 분석을 통해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계획한다. 이번 호에서는 <2021년 9월 민원동향>을 살펴본다.

Writer. 편집실

민원 추이

2021년 9월 민원 발생량은 총 1,487,791건
전월(1,228,390건) 대비 21.1% 증가,
전년 동월(1,204,176건) 대비 23.6% 증가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새울)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21. 10. 2. 14시)

신청인 현황

연령별로는 30대(34.6%) 및 40대(29.8%), 성별로는 남성(67.9%)이 다수를 차지

연령 및 성별은 30대 남성(25.3%), 40대 남성(17.4%), 40대 여성(12.5%) 등의 순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395,008건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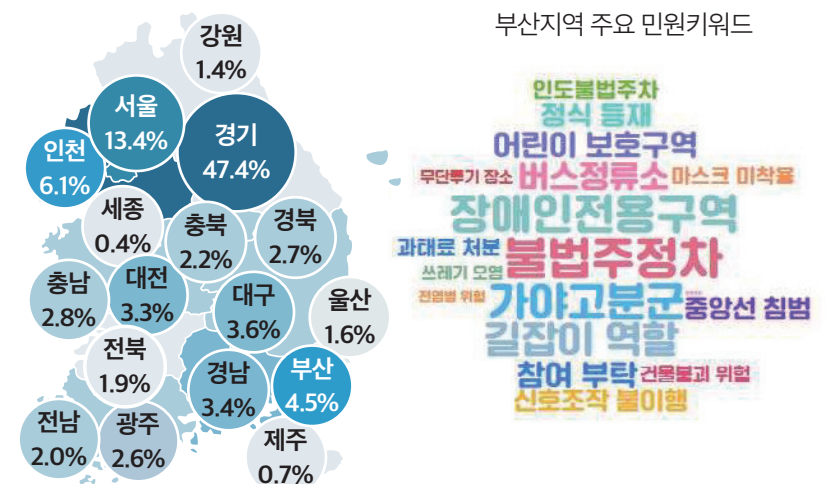
연령별 현황	20대 이하	11.0%
	30대	34.6%
	40대	29.8%
	50대	14.1%
	60대 이상	10.4%

성별 현황	남성	67.9%
	여성	32.1%

지역별 현황

경기 47.4%(531,502건), 서울 13.4%(149,885건), 인천 6.1%(68,697건), 부산 4.5%(50,931건), 대구 3.6%(39,866건) 등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66.9% 차지

자동차 운행 관련 생활불편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부산이 가장 많이 증가(9.9%↑), 부산 중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민원이 가장 많음(6,532건)



분야별 현황

분야별로는 경찰 분야(33.5%)가 가장 많고, 교통(13.1%), 도로(7.6%), 환경(7.5%), 주택건축(5.4%), 행정안전(5.2%), 도시(3.4%) 분야 등의 순

경찰	교통	교육	도로	행정안전	재정	환경	주택건축	산업통상
32.9%	11.8%	7.2%	7.1%	6.9%	4.5%	4.4%	3.5%	2.3%
문화	국방	법무	보건	관광	세무	수자원	도시	방송통신
2.1%	1.9%	1.8%	1.5%	1.5%	1.4%	1.4%	1.3%	1.0%
노동	복지	외무통일	과학기술	사범	농림축산	체육	해양수산	우정
1.0%	0.8%	0.7%	0.7%	0.5%	0.5%	0.5%	0.5%	0.2%

증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등 재정 분야 증가



재정
1017.7%↑



세무
468.7%↑



교육
259.1%↑



외무통일
188.8%↑



복지
163.0%↑

감소



방송통신
61.7%↓



도시
53.9%↓



법무
44.8%↓



주택건축
24.9%↓



체육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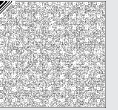
민원 키워드

9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9월 6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불법주정차, 교통 대책, 광역교통대책 수립, 도심 접근성 등 ‘교통 환경 개선’과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상당수 차지



Top 30 키워드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1	불법주정차	11	신설 계획	21	환경정책기본법
2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12	수정 반영	22	학교부지
3	매교초 설립	13	하수처리장	23	위례신호희망타운
4	장애인 전용구역	14	어린이 보호구역	24	벌칙규정 강화
5	신도시 주민	15	도심 접근성	25	개통 지연
6	교통 대책	16	갈매역 정	26	사업비 부족분
7	향동지구 주민	17	팔달 재개발	27	추가 협상
8	지역간 분쟁	18	유치원 시설	28	착공 지연
9	군시설물 특성	19	환경영향지점 선정	29	교통 편의
10	광역교통대책 수립	20	교량형 철로	30	재개발지역



10월의 관심키워드 : 독감 예방접종

독감이 유행하는 11월이 되기 전인 9~10월부터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무료접종 대상 여부 및 코로나19 백신과 접종 간격 문의, 백신 부족으로 인한 접종 어려움 등 각종 민원 발생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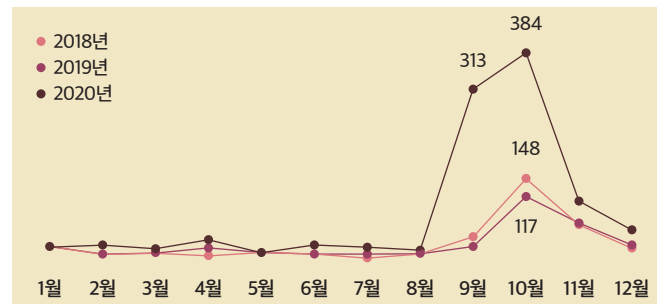
* 2회 접종 필요 어린이와 임신부('21. 9. 14.~'22. 4. 30.) / 어린이('21. 10. 14.~'22. 2. 28.)
어르신(75세 이상 '21. 10. 12.~'22. 2. 28. / 70~74세 '21. 10. 18.~'22. 2. 28. / 65세 이상 '21. 10. 21.~'22. 2. 28.)

민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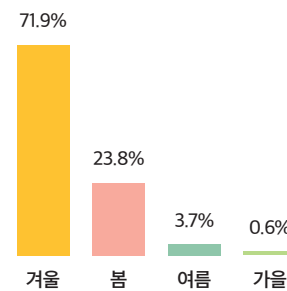
최근 3년간('18. 1월~'20. 12월) '독감 예방접종' 관련 민원은 총 1,714건, 독감 유행(매년 11월~다음해 4월) 전인 10월에 가장 많은 민원 발생

* '5년간('15~'19년) '독감' 진료환자수의 경우 겨울 71.9% 봄 23.8% 여름 3.7% 가을 0.6% 순으로 많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3년간 연도별 / 월별 민원 현황>



<계절별 독감환자 비율>



신청인, 신청지역

신청인은 남성(61.2%)이 여성(38.8%)보다 많고, 30대(27.8%), 40대(26.2%), 20대(17.4%), 50대(16.9%), 60대(6.8%) 등의 순

* '성별 정보 확인 가능 804건, 연령 정보 확인 가능 2,635건 대상
신청지역은 경기(27.3%), 서울(20.8%), 인천(6.2%), 부산(6.1%), 대구(5.7%) 순

* '신청지역 정보 확인 가능 1,548건(전체의 90.3%) 대상

처리기관

처리기관은 중앙행정기관 51.0%, 기초자치단체 37.1%, 광역자치단체 5.5% 순

민원 사례

[무료접종 대상 여부, 코로나19 백신과 접종 간격 문의]

- 아들이 2001년 9월생인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독감 무료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 9월, 서울 서초구)

[백신 부족으로 인한 접종 어려움 호소]

- 지정병원 열 곳 정도를 다니고 전화하며 알아보았지만 예방접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예방접종 후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이 나왔는데 백신을 구할 수 없어 맞지 못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 10월, 경남 거제시)

[누리집 이용 등 예방접종 시 경험한 불편 제기]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예약을 하였습니다. 예진표도 미리 제출하였으나, 병원은 인터넷 신청이 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줄을 서서 대기 순번을 받고 예진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 9월, 대구 서구)

[출장접종 가능 여부 확인 요청 등 기타 요청사항]

- 의료원에서 혹시 모를 노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관내 요양기관 및 시설에 담당 의료진이 방문하여 독감 접종을 하고자 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료진이 방문하여 접종이 가능한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20. 9월, 강원 속초시)

현실 세계를 흔드는 초현실 세계 메타버스 M e t a v e r s e



지도에는 없지만 어디에나 있는 세계.
실시간으로 생성하고 소멸하며 재창조되는 세계.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사는 동시에 메타버스에 살고 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 어떤 세계에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Writer. 이성미(트렌드 칼럼니스트)

존재하지 않지만

어디에나 있는 메타버스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을 의미하
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
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직역
하면, ‘초월 세계’, ‘초현실 세계’다. 강원대
학교 김상균 교수는 자신의 책 <메타버스
>에서 메타버스를 “스마트폰, 컴퓨터, 인
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
상, 디지털화된 지구”, “인간이 디지털 기
술로 현실 세계를 초월해서 만든 여러 세
계”라고 정의한다. 즉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물리적 지구와 디지털 지구인
메타버스가 공존한다.

메타버스라는 말은 1992년 출간된 닐 스
티븐슨(Neal Town Stephenson)의 SF 장
편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에 처
음 등장했다. ‘아바타’라는 말도 이 소설에
처음 등장한다. 소설 속 주인공 ‘히로 프로
타고니스트’는 아바타라는 가상의 신체를
빌려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에 들어간다.
그는 현실 세계에서는 피자 배달부지만,
가상 세계에서만큼은 최고의 전사다. 현
실 세계와 가상 세계. 그 사이를 넘나드는
인간. 30년 전에는 SF소설에나 등장할 세
계와 인물이 오늘날에는 우리 주변 어디
에나 있다.



메타버스를 인지하기 전부터 우리는 디
지탈 공간에 우리 일상을 기록하고 공유
했고, 아바타를 통해 또 다른 나를 보여
줬으며, 플랫폼을 통해 현실 세계를 소
환하고, 가상 세계 속 전쟁터를 누벼왔
다. 미국미래학협회 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는 메타버스를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 세계, 라이프
로깅(Lifeloggging) 세계, 거울 세계(Mirror
Worlds), 가상 세계(Virtual Worlds) 네 가
지로 분류한다. 증강현실은 현실 위에 가
상의 이미지, 이야기, 세계관 등을 덧씌워
만든 세계다. 게임 ‘포켓몬고’나 사진 애플
리케이션 ‘스노우’가 대표적이다. 라이프
로깅은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 같이 경험
과 정보를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으로 기
록하고 저장하고 공유하는 세계다. 거울
세계는 현실 세계의 모습뿐만 아니라 정
보, 구조 등을 복사하듯 구현해낸 세계다.
에어비앤비, 배달의민족, 줌(ZOOM)과 같

은 플랫폼들이 대표적인 거울 세계다. 가상 세계는 말 그대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다.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리지니 등의 게임이나 로블록스, 세컨드 라이프 등의 커뮤니티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처럼 메타버스는 우리 삶 어디에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 인스타그램 속에는 맛집 찾기를 좋아하는 30대 여성으로 살면서, 전쟁 게임 안에서는 거대한 창을 휘두르는 전사로 살 수 있다. 어디에서건 어떤 얼굴과 말투와 성격으로 살아갈지 선택은 나의 몫이다.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메타버스는 우리 실생활 속에 빠르고 강력하게 파고들었다.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는 많은 일이 디지털 지구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방탄소년단(BTS)은 2020년 9월 게임 플랫폼 '포트나이트'를 통해 신곡 '다이너마이트'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고 콘서트를 진행했다. 그 이전에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의 질서는 그 세계의
법에 해당하는 메타버스 운영
기업의 규칙, 약관에만 의지할
수 없다. 사용자들 스스로
메타버스 세계관을 존중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공생해야 한다.

트는 자회사에서 개발한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Weverse)를 통해 행사 홍보, 콘서트 티켓 및 상품 판매, 공연 관람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 세계 팬들은 메타버스 안에서 콘서트를 관람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에 열광하며 감정을 공유했다. 현실 세계에서는 시간, 공간 등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메타버스 안에서는 가능하며, 이것이 현실 세계 이상의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가상 세계, 미국의 '로블록스'를 살펴보자. 로블록스는 자체 화폐 시스템을 갖추고 사용자가 주체가 되어 다양한 메타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이다. 사용자 수는 2020년 기준 1억 1천 5백만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이후 미국 아이들은 더는 밖에서 만나 놀지 않는다. 대신 로블록스에서 창작자이자 게임 참가자로서, 각자 또는 함께 경험하고 우정을



쌓아간다. 이처럼 메타버스는 사람들의 놀이터이자 도피처이며 동시에 누군가의 사업 플랫폼이며 생계 공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메타버스를 이용해 새로운 즐길 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사회문제를 해결해내는 도구로써도 활용한다. 대표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민권익위원회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VR·AR, AI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불편사항이나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공모전 '솔·직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현실 세계의 다양한 문제를 새로운 가상 세계,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존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디든 '내'가 있다는 점이다. 김상균 교수의 책 <메타버스>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현실의 나는 메타버스의 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실의 내가 메타버스의 나에게, 메타버스의 내가 현실의 나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당부한다. "메타버스는 사용자들 스스로 메타버스 세계관을 존중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공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즉 어떤 세계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소통하고 함께 살아내는 일이다. 어떤 메타버스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우리의 선택이다. 그러니 막연히 두려워하지도, 거부하지도 말자. 조금 더 과감해져도 좋다. 여권 없이도 갈 수 있는 새로운 세계, 메타버스로의 여행을 함께 떠나보자.



국민의 새로운 권리

적극행정 국민신청하고 소극행정 재신고하세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재신고제’ 도입



우리 국민 누구나, 앞으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적극행정’을 신청하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난 7월 27일부터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재신고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꼭 확인하세요!

Writer. 편집실

Q.
적극행정
국민
신청제가
뭔가요?

Q.
적극행정
국민신청
활용 예시를
알려주세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국민이 공익 목적의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우수공무원 포상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Case 1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제안 사례

ㄱ씨는 이륜자동차의 난폭운전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위한 방안으로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해달라는 국민제안을 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구조 및 운행 특성상 실효성이 낮다.”며 불채택하였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규제할 실질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적극행정 국민신청

⇒ 국민권익위는 배달 서비스 활성화 등에 따라 이륜자동차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륜자동차에 앞 번호판 부착 근거를 마련하도록 ‘의견제시’



Case 2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 사례

ㄴ씨는 신차(3.1톤, 3,933cc)를 구매하고 추가지원금을 00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00시는 기존 차량(2.8톤, 3,907cc)보다 새로 구입한 차량의 최대적재량과 배기량이 많다는 이유로 추가지원금 지급을 거부했고, 환경부는 현행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신규 구매 차량의 최대적재량과 배기량 중 어느 하나라도 기존 차량보다 많은 경우 추가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ㄴ씨는 “실질적으로 동급 차량임에도 소량의 최대적재량과 배기량이 소량 많다는 이유로 추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적극행정 국민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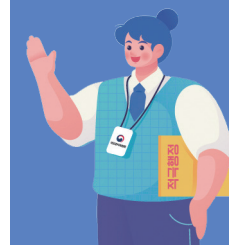
⇒ 국민권익위는 기존 차량의 최대적재량과 배기량에 맞는 시판 차량이 없는 경우 기존 차량보다 부득이하게 최대적재량과 배기량이 많은 차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점, 제도 목적과 취지상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급 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환경부에 ‘의견제시’

[적극행정 국민신청 방법]

1. 국민신문고를 통해 적극행정 신청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토, 배정 및 의견제시
3. 각 기관은 적극행정 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

Q.
어떤 경우가
소극행정에
해당하나요?

Q.
소극행정
재신고의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사건 지연 처리

임금체불이 1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없으며, 고용주는 다른 주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재산을 은닉하고 있음에도 사건처리를 미루고 있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

풋살장 방역지침 위반신고 소극적 처리

○○풋살장의 방역지침 미준수에 대해 200여 회 제보하였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보지 못했다는 사유로 적극적으로 풋살장을 점검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건소의 소극적 대응

백신접종 후 두드러기가 심해 보건소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업무담당자가 불친절하고 소극적으로 대응

[소극행정 재신고 방법]

1. 각 행정기관 감사부서에 1차 신고한 내용 불수용
2.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권익위에 재신고
3. 국민권익위가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권고



국민의 곁에서 언제나 ON

권익 포커스는 국민의 고충과 불편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는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국민권익위)의 활약상을 조명합니다. 이번 포커스에서는 조정을 통해 문화재 보존과
마을주민 교통환경 개선 문제를 함께 해결한 사례와 공공기관 상담전화 이용시
음성전화 요금이 적용되도록 권고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Writer. 편집실

#1

노근리 쌍굴다리 대체 철도입체교차로 설치로 교통문제 해결

“과거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문화재도 지키고
교통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고민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인가요?

노근리 ‘쌍굴다리’는 6·25전쟁 중이던
1950년 7월 25일에서 29일 미군부대가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도
가 지나는 쌍굴다리에서 민간인을 폭격과
기관총으로 학살한 사건이 벌어진 현장으
로 지금도 경부선 기차가 지나가며, 근대
문화재로 등록돼 있다.
쌍굴다리에는 1차선 도로와 하천이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군도가 지나고
있는데 차량 교통량이 증가하고 대형차량
의 통행이 빈번하다. 또한 쌍굴다리를 지
나는 도로의 선형이 굴곡지고 협소해 우

기 때 하천 범람으로 교통위험이 커 주민
들이 교통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영동군은 쌍굴다리와 연결되는 군
도를 2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하
다가 쌍굴다리 보존 문제로 현재는 중단
했다.
영동군은 쌍굴다리 도로 2차선 구조물 개
선도 검토했으나 유족들의 강한 반대와
문화재청의 부정적 입장으로 구조 개량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한 영동군은 쌍굴다리 구조물 개선 대
신 쌍굴다리와 마찬가지로 경부선 철도가
지나는 인근 통로암거(수로)를 2차선 도
로로 확장하는 우회도로 안을 국가철도공
단과 협의했고, 국가철도공단도 긍정적으
로 검토했으나 통로암거가 A등급 관리시
설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그동안 교통개선을 위해 추진되던 방안들
이 무산되자 영동군 노근리 등 인근 3개
마을 주민은 쌍굴다리 문화재도 보존하고
교통개선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
라며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국민권익위는 신청인 대표와 영동군, 국
가철도공단, 문화재청 등 관계 기관이 참
여해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착수회의를 갖
고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의로 방안을 모
색했다. 이후 조사를 거쳐 ‘쌍굴다리’가 설
치된 지 90년이 지났는데도 문화재 훼손
우려 문제로 현재까지 보수보강 작업이
어려웠음을 확인했다. 이에 8차례 이상의





- •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문화재 보존, 철도
- • 안전, 마을주민 교통 환경 개선이라는 세
- •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는 ▲영동군과 국가철도공단은 노근리 쌍굴다리 문화재 보존 등을 위해 ‘쌍굴다리’를 대신할 ‘대체 철도입체 교차로’ 신설 ▲비용 분담비율은 올해까지 양자가 협의해 결정 ▲영동군은 그 밖의 군도 5호선과 24호선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쌍굴다리 보존 및 보수·보강 보조금 예산 지원 ▲영동군과 충청북도 문화재 보존을 위한 보조금의 비율 조정 가능 ▲쌍굴다리 보수·보강 추진 시 국가철도공단 및 유족 대표와 협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사점

노근리 쌍굴다리는 근대문화재이며 또한 쌍굴다리 바로 옆에는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노근리 평화공원’이 있는데 2019년에는 방문객이 16만 명이 넘을 정도로 지역의 명소다. 이번 조정회의는 관계기관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문화재인 쌍굴다리 보존 및 지역 개발과 철도시설로서의 안전 문제까지 한꺼번에 풀 수 있는 계기가 됐다.



#2 이동전화로 공공기관 상담전화 이용할 땐 ‘음성전화’ 요금 적용

“상담을 한 것 뿐인데,
영상통화 요금을 내라니,
너무 행정편의적인
발상 아닌가요?
공공기관의 상담 전화
이용 요금 적정하게
해주세요.”

무슨 일인가요?

신청인은 2020년 헌혈관련 문의, 자녀의 한국사능력시험 접수 및 시험장소 문의, 건강보험 관련 상담을 하려고 공공기관에 이동전화로 통화하다가,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한 무료 부가/영상통화 시간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 지인(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다가 통화요금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이동전화 사용요금에 대하여 이동전화 가입회사에 문의한 바, 공공기관 상담전화 이용시 부가·영상통화

요금이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신청인은 공공기관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현행 유지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신청인은 다시 2021년 3월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등이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화요금 부담 여부에 대한 안내, 자동응답메뉴 간소화 등의 준수 의무가 있는지에 관해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신청인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공공기관 상담전화 이용 요금이 적절한 것인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신청하였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국민권익위는 먼저 공공기관 등의 대표번호 이용요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신청인과 같은 민원인 대부분은 대표번호에 전화할 때에 이동전화로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 된 현실이고, 세칙 제11조의2는 대표번호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통화요금은 시내전화요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동전화로 대표번호를 이용하더라도 통상의 표준요금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나, 통신사업자가 대

표번호 이용료를 음성전화 표준요금제가 아닌 부가/영상통화에서 먼저 차감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세칙 제11조의2에 규정된 통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확인했다. 그 밖에도 대표번호를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들이 공공기관 대표번호 이용요금 완화, 요금부담정보 사전 안내, 자동응답 메뉴 간소화 등 개선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사점

국민권익위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1조의2(대표번호서비스) 대표번호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통화요금은 시내전화요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된 점을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음성전화’ 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통신사업자의 요금약관 개선을 권고했으며 이 권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대표전화 유료 운영에 대해 통화가 연결되기 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주며, 자동응답메뉴의 인사말 등을 발신음으로 대체해 이용자들의 통신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권고했다.



권익이, 달라집니다!



-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개선해 나갑니다.
- #2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 및 음주치료 의무화 제도개선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 불공정과 특권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공정’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불공정한 제도에 대한 과감한 개선을 국민과 함께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Writer. 편집실

음주운전, 더 이상 실수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더 이상 한순간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살인행위’에 준하는 일이란 점에 사회적 합의가 이르고 있다. 사회 저명인사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특히 강력한 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 이는 문화적, 도덕적으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합당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때다.

#1 어떤 문제가 있나요?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 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음주운전의 상습성, 위험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사회 현안으로 대두하였고 실제로 음주운전 관련 민원도 증가 추세에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재범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의 민원이 음주운전 관련 민원의 과반(54.4%)을 차지하는 만큼, 음주운전은 더 이상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2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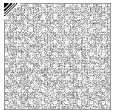
음주운전 사고는 최근 3년간(2017~2019년) 54,678건 발생하였고, 사망자 1,080명 부상자 92,277명에 이른다. 하루 평균 50건의 사고가 일어나고 1명의 사망자와 84.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구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017	19,517	439	33,364
2018	19,381	346	32,952
2019	15,780	295	25,961
합계	54,678	1,080	92,277
하루 평균(3년)	50	1	84.3

음주운전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재범률인데, 음주운전 단속 건수를 기준으로 한 재범률은 연평균 44%이며,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 사범보다도 평균 8%가 높은 수치다.

구분	음주운전 단속			마약류 사범		
	전체건수	재범건수	재범률	전체건수	재범건수	재범률
2017	205,187	90,602	44.2	14,123	5,131	36.3
2018	163,060	72,892	44.7	12,613	4,622	36.6
2019	130,772	57,200	43.7	16,044	5,710	35.6
2020(1~6월)	54,791	25,441	46.4	-	-	-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비용이 연간 1조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피해자는 후유장애가 남는 중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가중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가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보상하나, 이러한 보험금 지급에 따른 손실 등 부담은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3 국민신문고에서 살펴봤습니다.

음주운전은 치명적 인명피해를 야기하고, 한 번 위반한 사람이 반복 위반하는 상습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정지 및 취소, 안전의무교육 등의 제재는 경각심 고취 및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는 방식이다. 반면 해외 다수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를 도입해 음주운전 행위를 수동적으로 제어하는 등 강도 높은 방식을 택해왔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생각함 의견 조사 결과>

1차 의견조사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에 응답자의 94.3%가 '필요하다'고 응답

* 조사기간 : 2020년 11월 13일 ~ 12월 3일 참여인원 : 1,850명

2차 의견조사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에게 일정 기간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해야만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도입에 응답자의 95.1%가 '찬성한다'고 응답

* 조사기간 : 2021년 2월 25일 ~ 3월 10일 참여인원 : 2,187명

<전문가 자문 의견>

- 스웨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차량시동잠금장치 도입 후 음주운전 재범률이 40~90% 감소하고 운전자 스스로 건강상태가 좋아졌다고 여기는 경우 증가
- 차량시동잠금장치는 별도 관리 기관 설치 없이 운영 가능. 잠금장치에 저장된 자료를 관리센터에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관리센터는 6개월~1년마다 장치의 정밀도 등 검사 실시,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 가능. 해외 일부 운수회사에서는 자발적으로 설치하기도 함
- 음주운전 위반자 중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운전자가 비설치 운전자에 비해 재범률이 67% 낮고, 제거한 경우에도 50% 낮음
- 스웨덴의 '비전 제로 정책', 네덜란드의 '지속가능한 안전' 정책도 모든 교통 참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차원에서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등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4 어떻게 개선할까요?

1) 음주운전 행태 제어를 위한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고 운전이 금지된 기간이 지난 후 운전을 재개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위반 정도를 고려해 차별화된 의무 설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다. 도입 초기에는 제도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비용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에는 재정을 지원하고 장치 설치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 할인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음주운전 정도에 따른 차량시동잠금장치 의무 설치 기간

음주운전 정도에 따른 구분	의무 설치 기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면허 취소 처분을 1회 받은 경우	1년
면허 취소 처분 2회 또는 음주운전 사고(경상해)를 1회 일으킨 경우	2년
면허 취소 처분 3회 또는 음주운전 사고(경상해)를 2회 일으킨 경우	3년
면허 취소 처분 4회 이상 또는 음주운전 사고(경상해) 3회 이상 또는 음주운전 사고(중상해, 사망)를 발생시킨 경우	4년

2) 음주운전 습관 근원적 개선을 위한 음주치료 이수 의무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자의 성향, 심리적-정신적 상태, 알코올남용 정도 등을 정밀 분석 및 평가해 대상자별 맞춤형 치료를 실시하는 것이다.

구분	음주치료 내용
(1단계) 평가	음주운전 위반자의 알코올남용 정도, 위험 애호 및 심리적, 정신적 건강 상태 등을 정밀 측정 및 분석
(2단계) 설계	상담, 정신치료, 훈련 등 치료방법과 기간을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자 맞춤형으로 설계
(3단계) 치료	공인된 기관에서 '정신 건강 전문가'가 전문적 치료 실시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중독 전문병원, 중독관리통합센터 등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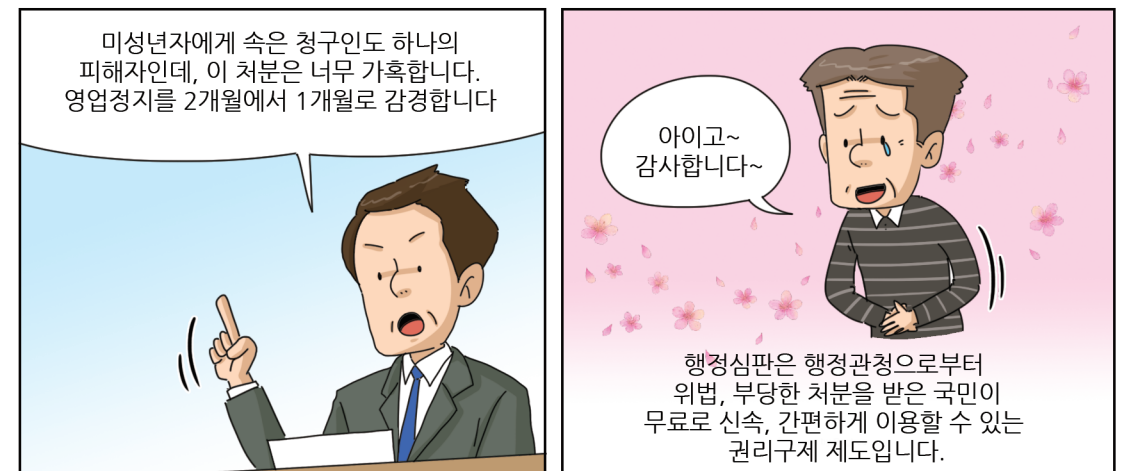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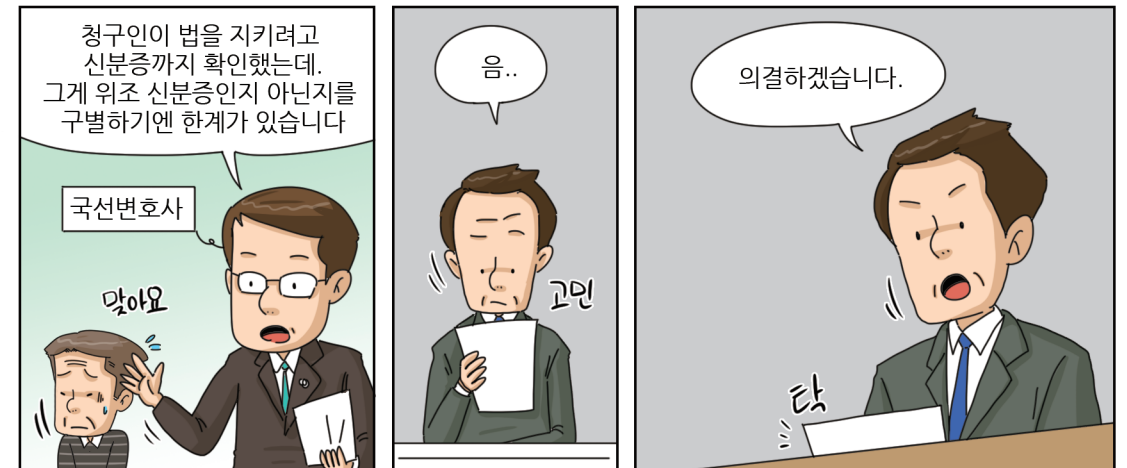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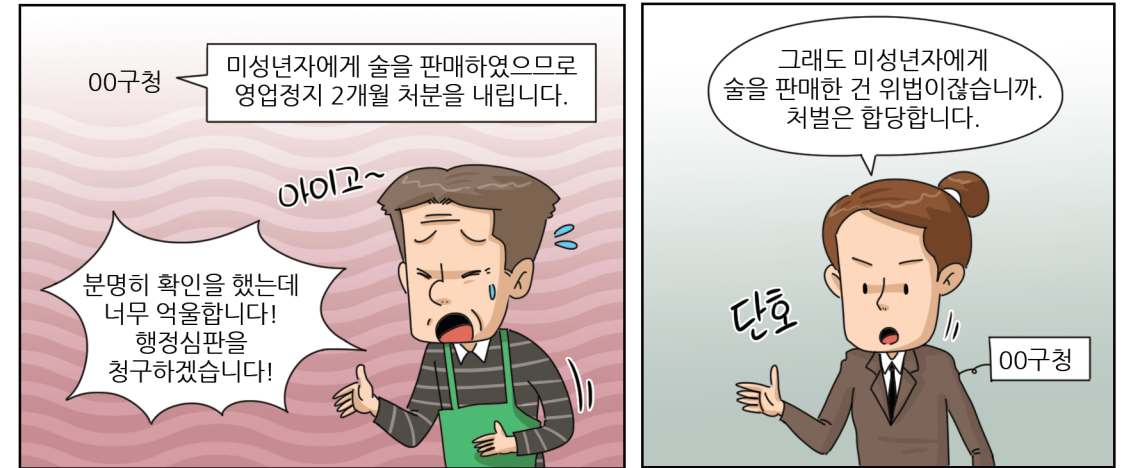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서는 치료 의무를 고지하고, 전문가의 정밀 평가와 치료, 경찰청의 치료 이수 여부 확인 및 치료 의무 해태 등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픈 아내 치료비에 생계비까지 막막해진 치킨집 할아버지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사례 11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처분 행정청을 관할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술·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통해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 사례를 살펴본다.

Writer. 편집실 illustration. 이종혁



국민이 원하면
정책이 바뀐다!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장려

적극행정 TF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민원이 거부되거나 국민제안이 불채택된 경우 국민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적 업무 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를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지난 7월 27일 개정·시행됐다. 이에 발맞춰 출범한 적극행정TF는 국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공직사회 속 활발한 적극행정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Writer. 배미진 Photo. 이대원

적극행정 TF



※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촬영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 유도

공무원이 맡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것이 「적극행정 운영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적극행정'의 정의는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7월 27일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시행되면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가 신설돼 소극행정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리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적극행정 TF가 출범했다.

적극행정 TF는 신설된 두 개의 제도가 국민의 곁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근절을 목표로 한다. 각 팀원이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재신고 접수·처리, 사후관리를 맡고 있다.

한정운 사무관은 "그동안 정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우수공무원 포상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적극행정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적극행정 TF

국민의 소중한 제안이 꽃필 수 있도록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겠다는 취지로 생긴 제도이다.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민원이 거부되거나 국민제안이 불채택된 경우, 국민이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한 후 소관 기관에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유도한다.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활용해 미비된 법령이나 제도를 정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적정한 처리 방향을 제시한다

「소극행정 재신고」는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관 기관에 신고했는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한번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국민권익위원회의
'화수분'같은 존재가
되길 기대하는
적극행정 TF

및 근절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소극행정 신고의 처리 현황 및 처리 결과를 확인·점검하고 신고사항에 대해 소관 행정기관의 장(長)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남윤석 주무관은 “소극행정 신고는 피신고기관에서 처리하다 보니 소극적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시 한번 검토해 신고 내용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신고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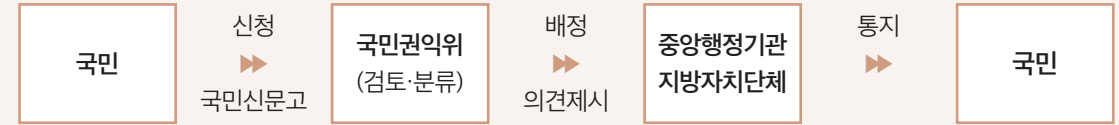
적극행정 TF는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확산과 소극행정 근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 새로운 권리로 자리 잡길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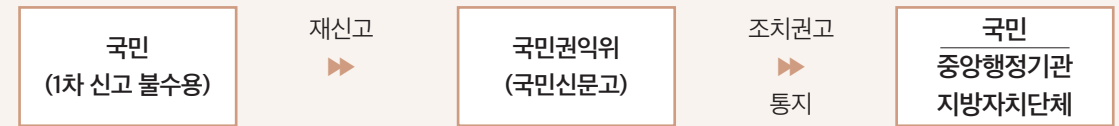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현재의 사회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 번호판 설치 의무화,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규제안 마련 등이다. 적극행정TF는 이들 신청과 관련된 여러 부처의 입장을 취합하고 의견을 제시해 나간다. 그리고 실질적인 개선사례가 늘어날 수 있도록 힘쓴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TF팀은 ‘공감’, ‘소통’, ‘타파’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낡은 생각과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달려가겠다는 각오다. 그들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공직사회를 기대해본다.

<적극·소극 행정 처리 과정>

적극행정 국민신청



소극행정 재신고



Mini Interview

인지도 높여 개선사례 증가 목표

시행 초기단계인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재신고제’를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이 두 제도를 통한 실질적인 개선 사례가 늘어나, 두 제도가 국민의 새로운 권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윤석 주무관

국민 체감하는 제도 만들기에 앞장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관련한 대외 기관 대응,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동향 분석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제도들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활성화를 목표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운 사무관

설악산,
색(色)의 경계를
허물다

다들 물어봐...
—
국민권익위원회

양양 주전골 산책

평소 등산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젖던 사람들도 가을이면 마음이 상송생송하다. 곱게 물든 단풍 탓이다. 해마다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오는 걸 보면 자연의 섭리가 분명하다. 울긋불긋 옷을 갈아입은 산야는 마지막 피날레를 준비한다. 제철 맞은 단풍의 향연을 놓치면 또 한해를 기다려야 한다. 남설악 지구에서 가장 빼어난 계곡미를 자랑하는 양양의 오색 주전골을 찾았다.

Writer Photo. 임운석(여행작가)



바위틈에 뿌리 내린 나무가 송고해보인다

우리나라 식물생태의 보고, 설악산

우리나라의 많고 많은 명산 가운데 으뜸을 꼽자면 설악산이 아닐까. 하늘을 향해 용솟음치듯 솟구치는 암봉들이 병풍처럼 펼쳐지고, 울퉁불퉁 사납게 생긴 기암들이 적재적소에 자리를 잡은 형국이 가히 신의 한 수라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설악산을 찾은 때가 가을이라면……, 더 말해서 무엇하랴. 그저 감탄하고 놀랄 뿐이다.

설악산 최고봉인 대청봉(1,708m)은 한라산, 지리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높이뿐만 아니라 품도 깊고 넓다. 대청봉을 기준으로 인제 방면은 내설악, 한계령에서 오색방면은 남설악, 양양의 일부 구간과 속초, 고성이 포함된 동쪽 지역은 외설악이

하늘을 향해 용솟음치듯
솟구치는 암봉들이
병풍처럼 펼쳐지고
울퉁불퉁 사납게 생긴
기암들이 적재적소에
자리를 잡은 형국은 가히
신의 한 수라 할 만하다.

다. 4개 시군에 걸친 너른 산세는 각기 다른 매력을 발산한다. 외설악은 울산바위, 비선대, 금강굴, 권금성과 같은 절경에 풍성한 이야기가 함께 깃들여져 있고, 내설악에는 여성미가 돋보이는 아기자기한 비경을 간직하고 있다. 또 남설악은 기골 장대한 대청봉의 웅장함과 전설이 함께 버무려져 등산의 묘미를 한층 더 상승시킨다. 그야말로 설악산의 풍경은 모두 비경 아니면 절경이다.

설악산은 생태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산이다. 그래서 1965년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1970년부터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유네스코 역시 198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설악산에는 1,000~1,200종에 이르는 희귀 식물이 자

생한다. 이는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식물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 아름다운 장미에 가시가 있듯 설악산은 북병이 도사리고 있다. 설악(雪嶽)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설악산은 눈 덮인 큰 산이다. 그래서 설악산은 누구나 찾고 싶은 명산이지만 아무나 오를 수 있는 만만한 산이 아니다. 크고 작은 돌들로 이루어진 끝없는 비탈, 의지할 데 없는 아찔한 절벽, 심 없이 올라야 하는 가파른 계단 등, 체력이 부족하거나 한순간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두려운 마음에 미리 포기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어느 코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산

책하듯 가볍게 설악산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코스가 오색방면의 남설악 구간이다.

산책하듯 설악산의 품에 들다

수도권에서 남설악의 핵심 탐방 코스인 주전골에 가려면 한계령을 넘어야 한다. 해발고도 920m에 있는 한계령 휴게소에선 이맘때 특별한 볼거리가 있다. 첩첩산중에 불이 난 듯 단풍이 붉게 타오르고 그 속을 물 흐르듯 달리는 차량의 행렬이 그것이다.

주전골에 발을 들이면 사람도 풍경이 된다





3 사이다처럼 톡 쏘는 맛이 강한 오색약수

설악산의 단풍은 대청봉에서부터 물들기 시작한다. 그때가 9월 하순께다. 이후 점점 고도를 낮추어 하강하다가 10월 중순이 되면 온 산이 물감을 풀어놓은 듯 화려하다. 이때가 붉은색과 노란색이 한데 뒤섞여 색의 경계가 허물어진 절정의 순간이다. 설악산 단풍의 진면목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때를 학수고대하며 한해를 버텼을 것이다.

그러니 가을 설악산을 찾는 이유가 단풍놀이에 있다면 굳이 힘들게 높은 곳까지 오를 필요는 없다. 단풍이 가장 빼어난 곳은 계곡 하류, 산 들머리니까. 남설악의 단풍놀이 명소는 주전골 계곡이다. 외설악의 천불동계곡, 내설악의 백담계곡과 더불어 설악산 3대 단풍놀이 코스로 꼽힌다. 평탄한 길을 따라 조성된 자연관찰로가

총 3.2km가량 이어진다. 왕복 3시간이면 넉넉히 단풍을 즐기고 돌아올 수 있다.

주전골은 옛날에 엽전을 주조하던 곳이라 해서 ‘쇠를 부어 만들 주(鑄)’, ‘돈 전(錢)’자를 써서 주전골이라 부른다. 주전골의 명소는 너럭바위 한가운데 있는 오색약수(천연기념물 제529호)터다. 오색(五色)은 옛 오색석사에 봄이면 다섯 가지 색의 꽃이 피는 나무가 있었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또 다른 이야기로 주전골 암반이 다섯 가지 색깔을 내기 때문이라한다. 오색약수는 철분이 다량 함유된 탄산수다. 그래서 사이다처럼 톡 쏘는 맛이 강하다. 위장병 등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약수터를 지나 아치형 출렁다리를 건넌다. 계곡을 따라 성국사까지 길이 잘 정비되어 있다. ‘설악산 오색약수 편한 길’이라 불리는 무장애 탐방로다. 비포장 구간도 있으나 걷기에 편안하도록 잘 다져놓아 불편하지 않다. 장애인, 노약자 등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조성한 것이다. 성국사를 지나면 곧이어 계곡을 따라 산책로 같은 등산로가 이어진다. 성난사내처럼 우뚝 선 기암괴석과 맑은 물, 화려한 단풍이 어우러진 남설악의 대표 비경으로 손색없는 절경이다. 비록 갈수기지만 조용한 밤에는 계곡에서 졸졸물 흐르는 소리가 들릴 듯하다.

짧지만 가을 색에 취하기엔 충분해

설악산은 기암괴석도 나무처럼 제각각이다. 집채만 한 바위가 일어서서 탐방객을 영접하는가 하면, 계곡에 드러누워 일광욕을 즐기는 바위도 있다. 놀라운 것은 바위틈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나무들이다. 그 모습이 숭고한 수도승처럼 고고해 보이는 것은 인간의 모습이 탐욕, 정욕에 찌든 까닭일까. 여러 기암 가운데 독주암의 모습이 단연 장관이다. 오색약수와 함께 주전골의 명물다운 풍모다.

독주암 정상부는 한 사람이 겨우 앉을 정도로 협소하다. 해서 독좌암으로 부르다가, 독주암으로 굳어졌다. 독주암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독주암 앞에 놓인 다리에서 올려다봐야 한다. 한껏 빛을 받은 독주암의 위용이 영화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

한 사람이 겨우 앉을 정도로 협소한 독주암 정상부



지니처럼 압도적이다.

독주암 다음으로 선녀탕과 선녀교를 지나면 금강문에 닿는다. 금강문은 불교 사찰에서 불법(佛法)의 수호신인 금강역사상이 지키는 문이다. 하지만 이곳 금강문은 널찍한 바위가 서로 마주 보고 기댄 바위 문이다.

단풍놀이의 마지막 지점은 용소폭포다. 이름처럼 이무기가 살다 용이 되어 승천했다는 전설을 품은 곳이다. 옥빛처럼 맑은 용소폭포 주변에 나무가 울창하지만 대부분 잎사귀를 떨군 터라 찬연한 단풍은 볼 수 없다. 골바람이 강한 탓에 다른 곳보다 잎이 먼저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파란 하늘이 커튼처럼 드리워져 있어 색감을 더한다. 용소폭포를 뒤로하고 출발지점으로 되돌아 나온다. 이로써 주전골 계곡 단풍놀이는 막을 내린다.

Tip 여행 팁

- 등산 초보자가 아니라면, 한계령 너머 흘림골 공원 지킴터에서 오색분소까지 이어지는 코스(7km, 3시간 소요)를 선택해도 좋다. 설악산 서북 능선을 한 눈에 담으며 일망무제를 체험할 수 있다. 단, 안전보강 사업 시행 중으로 개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내비게이션 정보** : 남설악탐방지원센터 (강원도 양양군 서면 대청봉길 103 오색리 주차장)
- **문의**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033-801-0900

나의
일기
로

너희들의
일기
로

2020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장려상

Writer. 임도이

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는 교직원의 촌지 문화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지던 시기였다. 학교는 그야말로 비상이었다. 지금이야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인해 이런 문제가 없지만, 이때만 해도 ‘성의 표시’가 당연히 여겨지던 시절이었다. 특히나 촌지 문화가 횡행하던 부모님 세대에서는 ‘교사 5년 하고 집을 못 사면 바보’라는 말이 있었으니 말이다.

현장 체험이 있는 날이면 반장의 부모님이 선생님의 도시락과 간식을 챙겼고, 스승의 날이면 돈을 걸어 선생님께 선물과 꽃을 드리고 파티를 열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 모두 이런 ‘관례’에 대해 불만은 없었다. 부담은 있었다. 그러나 그 화살은 부패한 교사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가 끌어안았다.



‘우리 집은 왜 가난해서?’
‘저 녀석은 뭐 하러 반장에 나가서?’

사실 국공립 학교에 다녔던 어린 나에게는 이런 일이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다. 실제로 우리 세대로 오면서 촌지 문화는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였다. 돌이켜 보면 이것도 부당한 일이었지 싶은 것들은 있었지만, 큰돈이 오가는 문제는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만 일어났던 일이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이런 생각은 사립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곧바로 깨졌다. 고등학교 시절 부반장이 되었는데, 담임 선생님은 나를 교무실로 불러 이번 학부모 참관 수업에 부모님을 모셔 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집은 부모님 두 분 모두 맞벌이를 하셔서 바쁘다고 했지만 담임 선생님은 부모님이 꼭 와야 한다고 강경하게 말씀하셨다. 당시 나는 내 대학 진학에 대해 상담하려고 그러시나 생각해서 별생각 없이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어머니가 하루 연차를 내고 학교에 오셨다. 그런데 어머니가 학부모 참관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와서 내게 해준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반장과 부반장 엄마들을 교장실로 불러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각자 50만 원씩 학부모회장에게 내시면 됩니다. 모인 돈은 학교 관리와 행정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건 시작이었다. 우리는 10반까지 있었으니 1,000만 원을 가져간 것인데, 이것으로도 부족했는지 학교는 각종 행사를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내리 반장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고, 속상한 마음이 들어 어머니께 물었다.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없었어요? 요즘 시대에 이래도 돼?”

“몇 반인지 누구 엄마인지 다 아는데 거기서 어떻게 반대를 하니. 엄마가

그 돈 못 내겠다고 하면 네가 피해를 볼 텐데.”

그렇다. 퇴직하지 않는 한 교사가 바뀌지도 않는 것이 사립 고등학교다. 대학교 입시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일을 크게 만드느니 그깟 50만 원은 그냥 낼 수 있는 돈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집 가정 상황이었고 우리 반 반장은 달랐다. 막내인 나와 달리 반장은 아직 어린 동생들도 있었고 문제집도 마련하기 힘들어 교무실에서 남는 문제집을 받아 오는 형편이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반장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속상해했고 나 또한 공감했다.

반장은 나와 다른 반 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싶어 했으나 결국은 무산됐다. 사실 예견된 일이었다. 이 시기에 선생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은 아이들과 학부모는 아무도 없었다. 5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생활기록부에 한 줄이라도 좋은 말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에서 잡음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학급 임원이 아닌 일반 학우들은 굳이 이 일에 끼고 싶어 하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학교가 아닌 서로에게 화살을 돌렸다.

“50만 원도 못 내? 그냥 좀 내면 안 돼?”

“너는 호구처럼 내고 살든가.”

돈을 받는 이는 학교인데 우리는 서로를 비겁자와 가난뱅이로 편을 갈라 싸웠다. 승자가 없는 싸움이었다. 그러나 상처를 가장 많이 입은 쪽은 확연히 드러났다. 길어지는 다툼에 지친 학생들은 우리 반에 짜증을 내보였다.

비단 학생들만의 일이 아니었다. 담임 선생님들은 이런 일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다. 차마 교육자로서 돈을 내라고 다그치지도 못했고, 위로부터는 지금껏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선생 반에서만 이런 일이 생기냐며 쓴소리를 들었다.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느꼈다.

‘그냥 좀 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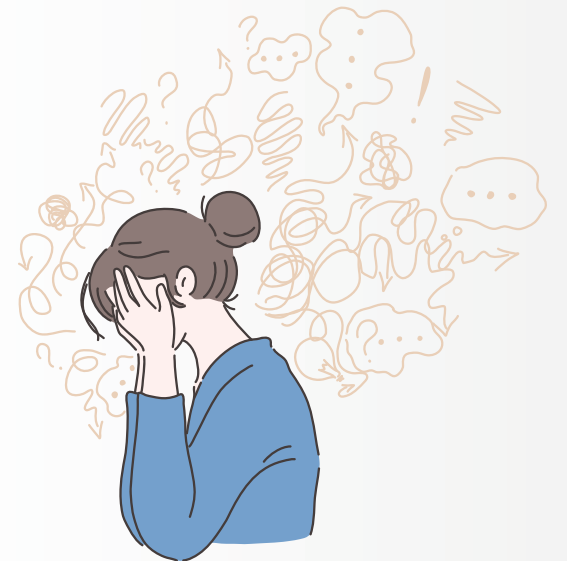
나는 학창 시절 내내 교대를 지망했으나 이 사건 이후로 진로가 바뀌었다. 교사가 되어 이런 문제에 또다시 직면할 용기가 없었다. 나는 선생님에게 미래의 내 모습을 투영했다.

‘내가 선생님이었다고 해도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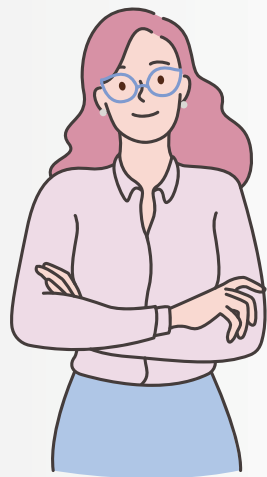
‘생활기록부 걱정에 아무것도 못 하고 말로만 반장을 응원한다는 나와 임용에 문제가 될까 입을 다무는 선생님이 뭐가 다를까?’

대학 입시가 인생의 전부이던 아이들과 촌지 문화에서 자랐던 학부모들, 기간제 교사였던 담임, 관행대로 하겠다는 학교. 사실상 일대 다수의 싸움이었다. 나 또한 반장의 편을 들면서도 이미 어머니가 돈을 내버린 상태라 돈을 내지 않은 학생은 반장 한 명뿐이었다. 결국, 딸아이의 학교생활을 걱정한 반장의 어머니가 돈을 마련해 오면서 이 일은 끝이 났다.

학교의 부정부패는 우리 모두에게 생채기만 남겼다. 담임 선생님은 권위를 잃었고 반장은 자존심을 잃었으며 친구들은 우정을 잃었다. 반 분위기는 1년 내내 싸늘했다. 얻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이 돈을 내서 학급 임원들이 특별히 더 좋은 생활기록부를 얻었다거나, 학교생활이 편해졌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학교는 그저 늘 받던 것을 받았을 뿐이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도 기본적인
부분들을 지나치고
간다. 어떤
곳에서는 청렴함이
필수적으로,
강박적으로라도
요구되어야 한다.
학교는 아이들의
영혼을 키우는
곳이다.



그렇게 쓸쓸한 기억을 가지고 졸업한 지 2년 후
그 일이 거의 잊힐 무렵, 친하게 지냈던 동아리
후배가 모교의 소식을 알려왔다.

“선배, 이번 1학년들 장난 아니에요. 교육청에
도 신고하고 국민 신문고에도 알렸대요.”

정확하게는 학교 교칙 중에 학생 인권에 반하는
조항이 있어 신고했는데 감사가 나오자 누군가
돈을 걷는 관행까지 제기하며 일이 커졌다는 것
이다. 교육청은 이 문제를 절대 좌시하지 않았
다. 일단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관행은 없애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조용히 덮었
다고도 전해 주었다.

“저는 반장도 아니었어서 몰랐어요. 선배 때도
돈 걷었어요?”

여기에 내가 무슨 답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
지 않는다. 학교 선생님들의 욕을 시원하게 했
던 듯도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듯도 있
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정확히 기억난다. 얼떨떨
했다는 것. 그게 정말 사라졌다고? 그리고 다음
해 9월 즈음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나는 믿
기로 했다. 이제 그 관행은 학생들을 괴롭힐 수
없겠구나, 하고.

내가 사회에 나왔을 때, 내가 ‘학교’의 입장이
되는 순간들이 생겼다. 관행이고, 하지 않으면

나만 바보가 되는. 그러나 내가 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끝날 악습. 나에게
생기는 이득은 쓸쓸한 정도이지만 상대방에게는 부담스럽고 거절하기 힘든
상황들. 그냥 내가 한 번 고집불통인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
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지금도 가끔 유혹이 밀려올 때면 그 시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우유부단한
나를 억지로 들춰낸다. 그 시절 치졸한 괴롭힘이 동반된 부정부패는 예민하고
어렸던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앗아가 버렸고 남은 것은 정의할 수 없는 상실감
이다. 그것이 어른들에 대한 신뢰였을지, 내 오랜 꿈이던 교직 생활에 대한 환
상이었을지. 혹은 나보다 몇 살은 어린 1학년들이 가져간, 그 시절 우리가 가
지지 못했던 권리일지.

아직도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내 안의 열일곱 살은 이런 부분에 있어 매
우 단호하다. 유연하게 관행을 받아들일 줄 모르고, 압박해도 무시로 일관하
는 고집불통. 그러면 나는 고민하다가도 기꺼이 이 열일곱 살의 손을 들어 준
다.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던 열일곱 살은 이제야 웃는다. 그
시절 우리의 눈을 피하던 어른들이 아닌 이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어른이
되는 순간이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도 기본적인 부분들을 지나치고 간다. 어떤 곳에서는 청
렴함이 필수적으로, 강박적으로라도 요구되어야 한다. 학교는 아이들의 영혼
을 키우는 곳이다. 그렇기에 나는 새장 안에 갇혀 있던 열일곱 살의 나에게 보
여 준다.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고, 당장 나 때에 모든 것이 바뀌진 않더라
도 참지 않는 어린 학생과 불합리함을 받아들이고 힘을 보태 주는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청렴함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고 순간의 이득에 눈이 멀지 않는
어른들이 있어 오늘도 너의 열일곱과 나의 열일곱은 다르다.

국민의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

국민생각함 활용 지침 개선 사례

일회용 마스크 친환경 사용 및 처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은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건전한 토론과 협업을 통해 더 좋은 정책으로 구현해나가는 온라인 정책소통 플랫폼(www.idea.epeople.go.kr)이다. 이번 호에서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현된 '일회용 마스크 친환경 사용 및 처리' 사례를 살펴본다.

추진 배경

K방역의 핵심 용품인 마스크는 감염병 확산 우려로 재 활용할 수 없어 그대로 소각되거나 일부가 생활 주변 또는 여행지 곳곳에 버려져 국토 경관을 해치고 환경오염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유형별 사례

(불법투기) 마스크 등이 담긴 생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지도 않고 버리고 갔으니 법대로 처리 요구(20. 12, 충청북도 청주시)

(관리대책 요구) 누군가 마스크, 장갑 등 쓰레기들을 도로에 버리고 있고, 청소해도 매일 반복되니 쓰레기투기 금지 표시판 및 CCTV 설치 제안(21. 1, 경상남도 김해시)

(친환경 제품 및 재사용) 생분해가 가능한 일회용 마스크나 세척 가능한 제품이 활성화 되어야 하고, 통풍성 개선도 필요(20. 2, 광주광역시)

관련 설문조사

1차

2021년 1월 28일 ~ 2월 14일 1,215명 참여

2차

2021년 3월 5일 ~ 3월 19일 876명 참여

이 문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보건 안전성 담보되는
'다회용' 사용권장, 어떻게 생각하나요?

80% 동의

조금 비싸도 친환경 마스크
구매 의향 있으신가요?

71% 동의

마스크 착용 홍보 시
폐기 유의사항도 알려주길!

41.6% 가 선호

평소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한다는 비율이 82%로 다수였으며, 이용자 대부분이 친환경 사용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을 홍보할 때 폐기시 유의사항도 병행 안내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제도의 개선

보건용 마스크 친환경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행 추세라면 보건용 마스크는 연간 73억개 이상 소비가 추산되고, 국민생각함 설문응답자 80%도 다회용 마스크로 정책 전환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일회용 마스크 위주 대책에서 다회용 마스크의 사용 권장 정책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용 후 폐기방법 대국민 홍보 강화해야

방역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홍보하면서 폐 마스크의 올바른 폐기방법을 병행하여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초·중·고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환경 수업에 '마스크 사용 및 폐기방법' 추가 및 참여형 학습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 마스크 처리 및 수거 방식 개선 필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을 감안, 감염병 예방 및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해 다중 이용 장소에 마스크 전용 수거함 설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방역상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일반 폐 마스크의 수거체계 마련하고 자원 재활용 방안도 검토할 때입니다. 지자체 공공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취약지(공원·해변·산책로 등) 폐 마스크 주기적 청소 및 관리도 필요합니다. 민관이 연계한 취약지 청소 및 환경지킴이 캠페인은 지속 전개해야 합니다.

독자의 소리

지난 2021년
<여름호>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송경현(경기도 성남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국민의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 코너의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도의 불편요인 개선' 사례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김건완(경기도 시흥시)

평소 어렵게만 느껴지던 행정심판 이야기를 만화로 접할 수 있어 이해하기 쉽고 흥미로웠습니다.

김정분(인천광역시 부평구)

이번 여름호에서는 무엇보다도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한 80일간의 전국 청렴 대장정' 기사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김영자(대구광역시 서구)

이해충돌방지법이 무려 9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니 반가우면서도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방성애(경상남도 거창군)

지심도의 주민-행정 갈등 현장에서 권익위가 상생 방안을 찾아 원만히 해결했다는 기사를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QUIZ.

'OOOO OOOOO'는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국민이 공익 목적의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지번호 정답 경찰음부즈만

정답자	황득규(부산광역시 동래구)	강병국(서울특별시 강동구)
	김희용(경기도 수원시)	조일윤(광주광역시 서구)
	도성열(대구광역시 달서구)	

<국민권익>을 읽고 소감과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모두 열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국민권익 열독왕

<국민권익>을
꼼꼼히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2021

접수기간 2021. 8. 31 - 11. 8 오전 10:00까지

솔·직 챌린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메타버스 [솔]루션을
국민이 [직]접 개발하는 솔!직!챌린지!

● 공모개요

메타버스 기반의 [솔]루션을 국민이 [직]접 개발하여 일상생활 불편이나 사회문제 해결

● 공모주제 및 분야

메타버스가 여는 슬기로운 국민생활

※ 지정과제 (3개)

- ① 탄소 중립 : 자원 재활용,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 등 탄소배출 저감 방법
- ② 디지털포용 : 디지털 정보에 취약한 소외계층을 돕는 방법
- ③ 코로나극복 : 코로나 예방 및 극복을 위한 대응 방법

● 참가자격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 *단체(팀)의 경우, 최대인원 5인으로 제한

● 참가접수

공식 홈페이지(WWW. 2021ictchallenge.kr)에서 온라인 접수 및 제출

● 시상내역 총 상금 1억원

대상	1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 2천만원
우수상	1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상 + 2천만원
장려상	4점	NIPA 원장상 + 1천만원
특별상	5점	단체장상 + 2백만원
특별상	2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 5백만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상 + 5백만원

● 문의처

2021 솔·직 챌린지 운영 사무국
070-4422-9843/070-4179-89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



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